

# 김광수, 복지부 안이한 지진대책 질타

### “전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진설계 19곳 중 1곳 뿐… 노인복지시설 등은 현황자료조차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복지부의 안이한 지진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에 전국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에 대한 내진을 현황 자료 및 정부대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

했지만, 복지부의 답변은 ‘내진을 관련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별도의 내진설계 기준 및 내진을 관련 대책 등 보유자료 없음’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진 관련 자료 및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유일하게 자료를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도 17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자료만 취합되어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확보된

8개 지역 173개 시설 중 36개소만이 내진 설계시설로 파악되어 내진율이 20.8%에 그쳤고 전북의 경우 19개 시설 중 1곳만 내진설계 시설로 5.3%에 불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 사건과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특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현재 복지부는 관

련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복지 시설 지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진과 관련해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범정부차원에서 복지시설을 비롯해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일체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檢, 안봉근·이재만 기소… 특수활동비 관련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된 첫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특검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납세준 전 국정원장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 19억원 등 모두 33억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의 뇌물액수 총 33억원을 공소장에 적시했고, 이후 추가금액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시절 받은 돈은 보다 늘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7월 2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해 총선 여론 조사 비용 5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은 당시 ‘007기방’에 5만원 권을 채워 이들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모두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기한 때문에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공여자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 상납 범행 전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문고리라 불렸던 정호성(48) 전 비서관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3인방(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정 전 비서관의 기소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

### 당정청 “공수처, 정기국회 처리 법무부안 토대로 野와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공수처법은 법무부 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회의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오늘 당정청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에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 열망이자 촛불 혁명 요구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협력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탄력적 신중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자 검찰 개혁을 위한 기구로서 현 권력에 대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공수처와 관련해 ▲독립적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기소권 보유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요청 ▲권한남용 우려 해소와 부패 척결 역량 강화 요청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와 범죄 범위의 합리적 설정 등 4대 원칙도 합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검사·수사관 등의 인력을 대폭 줄인 공수처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안에서 공수처 규모가 축소됐다는 논란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법무부와 위원회 간 충분히 논의하고 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안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 공수처장 임명 관련 입장차에 대해서 “(공수처)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넷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범계 의원,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 “청년어업인에게도 직접지불금 지급해줘야”

#### 김종회 의원,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어촌의 후계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에게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 부안)이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다.

20일 김종회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의 해양, 수산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어촌의 실정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을 통해 40세 미만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국내 청년어업인의 귀어 촉진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견고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어촌의 고령화와 어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아직도 다른 산업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어업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으나, 작금의 농어촌 고령화로 인한 국가 산업의 근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가는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千 “개혁연대, 내일 총회 후 본격 출범”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최근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 시도에 반발한 호남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 중인 ‘개혁개혁연대’에 대해 “내일 의원총회 후 서명 등 본격 출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20일 오전 MBC라디오 ‘변창립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국적으로 40명 국회의원 대부분이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지역구 의원은 거의 전원이 호남이니 지역구 의원은 호남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 의원들도 상당수 참여해서 저는 우선 한 20여명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결국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당도 소멸시키고 나라를 위해서도 극히 해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의 양식 있는 의원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안 대표가 당장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과 안 대표가 1차 물러서 정책연대, 선거연대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려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노선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암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